

광주시교육청·전남대·전남대병원 국감 현장

“광주 사립학교 특수학급 없는 이유는”

13일 광주에서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대, 전남대병원 등 3곳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임혜규)의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광주시교육청 국감장에서는 안 일한 교육행정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며 다소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된 반면,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국감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광주시교육청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광주시내 70개 사립 초·중·고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 70곳 중 단 한 곳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는 특수교육을 포기한 것이나, 사립학교법인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만한 일이다”며 감도 높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사학과 유착은 전혀 없으며, 계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의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확대 실시율이 3.5%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또 수강료 과다징수 학원에 대한 느슨한 단속에 대해 추궁했다. 권 의원은 “대구나 울산은 한 번만 적발돼도 고소장지인데, 광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이런 솥방망이 처벌을 납득할 광주시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안 교육감이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한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으나, 권 의원은 “적발건수를 보니 8월 이전에 오히려 더 많았다”며 “강력 단속이라는 말만 할 뿐 실적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주 시내 모 중학교 3학년이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투신 자살을 기도한 사례를 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가 옳았는지를 따졌다. 안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의 대처가 옳지 않았다고 판단, 징계를 접수했다”고 답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불의를 빚은 사건을 두고, 시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물었다. 안 교육감이 “경징계였다”고 답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왼쪽) 의원이 1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있다.

수강료 과다징수 학원 솥방망이 처벌 질타 전남대 로스쿨 재원 244억 마련책 있나 전남대병원 교수 연구실적 감소 이유 뭐가

자, 조 의원은 “그게 어떻게 경징계 사안인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인질 협박이자 공갈이다”며 “청렴을 강조하는 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에서 소변 누 초등학교 3시간 동안 방치한 광주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징계 받은 일에 대해 안 교육감이 “교사의 입장도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교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라”고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대·전남대병원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전남대-여수대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정서적·심리적

통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유사 관련 전공학과의 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본부의 의지와 구성원의 의지가 함께 하기 어려운 점 등이 현실적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편제가 완성되는 2011년까지 전남대에 필요한 재원이 244억 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난해 발전기금이 167억원이었다. 이 정도로는 힘들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전남대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의치약계열의 취업률은 100%에 가까운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매우 낮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대치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 취업률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 인식보다는 교수들이 실시하는 교육이 취업과 동떨어진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대학의 경우 교수들이 학생 취업을 위해 발로 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행정직인 비전문성, 단과대별 노력 없이 본부에 의존, 교수 및 학과간 경쟁·평가 체계 불신 등 전남대 문제를 7가지로 축약했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전남대는 여수대와 통합합 평가 결과 최하위로 드러나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당하게 됐다”며 “학과간 통합 없이 힘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갈등이 심화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김영진 의원이 교수 연구실적이 ▲2006년 490건 ▲2007년 356건 ▲2008년 현재 208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은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 연말까지 계산해 본다면 많은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일제고사 철회 피켓 시위 눈길

■국감 이모저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대 국제회의동 인근에서는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이기 위한 시위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시교육청 정문에는 전교조 광주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피켓 시위를 통해 “학생 창의력을 말살하고 학교·학생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국감장인 전남대 국제회의동 앞에서는 한국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지부 회원 20여 명이 ▲비정규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확보 ▲법정교원 충원률 100% 달성과 미달대학 제재 ▲비정규직 교수에게 3인 가구 표준 생계비 보장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 이름 혼동 해프닝

○광주 서구가 지역구인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국감에서 안순일 교육감의 이름을 20년 전 교육감의 이름과 혼동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5선 의원이자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인지, 시교육청 국감 첫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영재학교 설립, 학교 급식비 미납 증가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안순일 교육감’을 두고 두 번이나 “안종일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지른 것.

김 의원실 관계자는 “평소 안 교육감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일부러 이름까지 불러준다는 것이 실수를 해 혼란을 부른 것 같다”며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안종일 교육감은 1986년 광주가 전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초대 관선 교육감을 지냈으며 현 안 교육감과는 숙부와 조카 사이다.

광주와 인연 강조 화기애애

○13일 오후 국회 교과위 국감이 진행될 전남대는 오전 시교육청에서 다소 딱딱했던 것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이목을 끌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임혜규(한나라당) 감사반장이 선봉에 섰다.

임 의원은 소개 발언을 통해 ‘5선으로 광주가 지역구인 김영진(민주당) 의원’, ‘광주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을 보낸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아버지 직장 관계로 광주에서 출생한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등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남대병원에 대한 질의 중 ‘어린 시절 뛰어놀며 곤충채집을 했던 병원’이라고 친근함을 과시했으며 임 의원은 정 의원이 질의를 마친 뒤 “너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피감기관장들의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호칭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진짜 존경하느냐”, “나에게는 ‘존경하는’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 철회하라”

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광주시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시업 계획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도 광역경제권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위적인 경제권 분할은 개발 시대로 돌아가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시키고 사회의 균열과 박탈감으로 대변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

외되고 쇠퇴해가는 곳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은 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 할 때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직 이르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최근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임기 내에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던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ONEY MOON' and '자유여행' (Free Travel) packages. It features various travel options with prices and includes a '무인출입' (Self-Check-in) section. The ad is colorful and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about different travel packages and their costs.